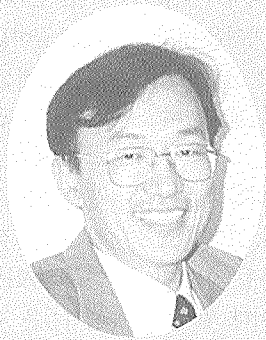


석유산업 자유화 후 정유업계의 활로



박운석
〈내외경제신문 산업부 기자〉

국 내 에너지산업의 일대 혁명으로 일컫는 석유산업 자유화가 본격 실시됐다. 정부주도형 담합으로 이제까지 실시돼 온 최고 판매고시가격이 폐지되고, 제품 가격책정은 정유사의 자율에 맡겨진 것이다.

지난 83년 제트유 용제를 시작으로 불기 시작한 가격 자유화가 13년만에 쏘석유제품으로 확대된 것이다.(LPG는 유보)

이와 함께 대리점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고 석유수출입업도 승인제가 폐지되고 등

록제로 전환되면서 일정 저장시설을 확보하면 누구나 수출입이 가능하게 됐다.

주지하다시피 국내 석유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이라는 명목으로 지난 30여년간 정부의 보호와 규제하에서 철저히 길들여져 와 자유화와 개방화 파고를 능수능란하게 타고 넘는 시장체질에는 그리 익숙치 못한 실정이다. 그렇다고 정해진 이익을 보장받으면서 건실하게 커왔는가 하면 그렇지도 못했다.

지난 해 정유5사 매출액은 20조원에 달하고 있으나, 순익은 지난 해 절반 수준인 1천 7백억원으로 추정돼 外華內資의 경영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유부문에서는 정부가 허용한 이익수준에 크게 못미쳐 1천억원의 순손실을 보였고, 최근 몇년새 이같은 적자 누증액이 자그마치 3천5백억원에 달하고 있어 정유업체들의 경영악화를 웅변해 주고 있다. 국내 도입 원유의 경질화, 저유황화 추세에 따른 실원유 도입가격의 증가분을 판매가격에 적절하게 반영치 못했을 뿐 아니라 운임도 유조선 선령제한 및 국제 운임시세 상승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치돼 왔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95년 적용한 표준정제비도 그 이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적용됨으로써 정제비 현실화가 제대로 안됐다.

게다가 급격한 환율 상승에 따라 유전스(USANCE)와 외화 차입금에 의한 환차손이 2천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어 경영압박의 주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같은 어려움 때문에 지난 해 연말까지만 해도 정유사들은 유가 자유화 실시와 관련 「제도 보완이나, 전격 실시나」를 놓고 신경전을 펼치며 침예하게 대립해왔다. 심지어 학계와 연구원등도 이에 가세해 갑론을박하면서 입씨름을 했다. 어쨌든 진통 끝에 「유가 자유화」호는 출항됐다. 이제는 어느 기업이 자유화 개방화의 파고를 적절하게 잘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로 남았다.

초기의 혼란은 자연스런 현상이고 업계로서는 당연히 넘어야할 과제로 치부될 수 있다. 이를테면 지금까지는 원유 가격과 환율 등을 고려해 그 평균값을 좋은 싹든 똑같은 원가로 매겨졌으나, 이제는 도입선과 유종별로 원가 부담이 다르고 이에 따라 전국 8천여개에 달하

는 주유소도 그 비용과 마진이 각기 달라 소비자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한동네 안에서 판매가격이 다르게 된다. 그동안 고정불변의 원칙으로 여겨져왔던 「가격에 대한 소비탄력성이 낮다」는 관념이 한 집 건너 한 주유소가 생기는 마당에 깨져가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유통업계의 대형화 추세로 경쟁력이 없거나 부실한 주유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정유사로서도 이제 무작정 유통시장에 자금을 쏟아붓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 석유유통시장은 「빈익빈 부익부」라는 시장경쟁원리가 그대로 표출될 것으로 보인다.

뛰니뛰니 해도 앞으로의 관심은 유가 향방에 모아진다. 업계 일각에서는 상한과 하한선의 유가 변동폭을 두자(가격밴드제)는 얘기도 있지만 정부로서도 아직 뾰족한 대안이 없는 듯하다. 다만 정유사와 대리점은 매주 수요일, 주유소는 매주 화·목요일 마다 한차레씩 휘발유, 등유, 경유, B-C유 등 4개 유종의 가격을 한국석유개발공사가 운영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에 입력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변동시기와 가격 책정은 자연스럽게 타사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해까지 최악의 불황을 겪은 정유사들로서는 가격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있는 비현실분을 가격에 반영, 누적적자를 만회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를 주저하게 하는 요인도 많다. 비용과 마진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인상은 마땅하다고 하나

왜 하필이면 소비자의 가계에 부담시키려 하느냐는 여론도 무시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 해 12월 14일 휘발유교통세가 20% 올라 8백15원으로 경충뛰었을 때 소비자로부터 집중적인 비난을 받았다. 세금 인상이 정유사들의 이익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데도 말이다.

또 이와 반대로 어느 한 회사가 도입 유가가 낮다는 이유로 제품가격을 내릴 경우 시장 고수를 위해 업계 전체가 출혈경쟁에 휘말려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이에 대해 업계는 나름대로 시나리오 작성에 몰두해 왔다. 그러나 예측되는 변수가 그대로 작용될 지는 지금으로선 아무도 모를 일이다. 업계는 초기 혼란을 없애고 유가 자유화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라면 정부의 적극적인 방향 제시와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제정해 조율을 해주길 바라고 있지만 정부로서도 자유화하는 마당에 예전처럼 섣뜻 나설 수도 없는 것이다.

업계는 최근 환율이 지난 해에 이어 계속 상승하고 있으나 이라크산 원유의 수출 재개로 국제유가가 내림세로 반전해 소비자가격 인상요인은 지난 연말보다 0.5%포인트 낮은 3%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8백15원(12월말기준)에서 8백40원까지는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화의 후유증을 가만히 앉아서 지켜볼 수만은 없다. 정부가 나서 치유해 주길 기대하기보다 업계 스스로가 경영 개선을 위해 홀로서기 연습을 해야 한다.

이러테면 유통시장에 깔린 자금을 회

수해 시설투자 재원으로 돌린다는지,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를 줄인다는지, 사업다각화로 수익구조를 개선한다는지, 다양한 코스트 절감노력들이 뒤따라야 한다. 내년부터 휘발유에 대한 광고를 자제하겠다는 최근 정유사들의 계획은 상당히 고무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소비자를 좋은 이해자 또는 협력자로 끌어들이야 한다. 결국 에너지와 같은 소비산업의 포괄적인 문제를 정유사가 혼자 끌어안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몇년간 제도의 허점으로 생긴 빛을 소비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갔는다는 것도 또한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업계는 소비자에게 석유산업을 이해시키는 것은 물론 석유산업의 중요성을 PR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그동안 보여왔던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인 경쟁보다는 당당한 경쟁능리를 세워야 할 것이며, 시장점유율에 집착하는 것보다 서비스 및 품질 향상에 주력해 생산 영업 유통 서비스 모든 부문에서 외국 메이저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교우위의 노후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나몰라라는 식으로 하루 아침에 발을 뺄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율과 경쟁풍토를 조성시키기 위해서라면 우선 유가연동제하에서 누적된 정유사들의 적자해소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경영개선을 명목으로 과다경쟁 전개, 수급상 혼란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의 절반은 정부가 져야 하기 때문이다. ☯